

“서해안권 메가시티 구상 본격화”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 전북 신성장 전략 제시

완주·전주 통합 관련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것”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10일 오전 전북비오염합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열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의 미래 발전 구상과 인수위원회 운영 방향, 전주·완주 통합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솔직담백하게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전북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전북·전남·제주를 연결하는 서해안권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역사·문화 자원을 있는 기반으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제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서해안 메가시티’ 구상을 설명했다.

특히 부안과 제주를 연결하는 항로와 서해안 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전북과 전남, 제주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전남과 제주 역시 추진 의지가 강하다”며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 뒤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공동 반영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해안 철도는 국가 광역교통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인사 논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당선인은 특정 인사가 인수위 참여 대상으로 추천됐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논란으로 인해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인수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그 뜻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캠프 차원에서는 정치적·도덕적 측면을 중심으로 검증은 진행했으며, 인수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도 차원에서 범죄 경력 등을 추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며 “인수위원 중에서

추가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범죄 전력이나 논란이 있는 인물의 선거 참여와 관련해서는 “과거를 반성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민주사회가 포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도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안은 전주·완주 통합 문제였다. 이 당선인은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자신이 통합 찬성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주·완주 통합이 필요하다면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논의 과정에서 완주군민들의 반대 의사가 확인된 만큼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통합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전주 시민과 완주군민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며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인기 내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완주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과 비전이 제시된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전주·완주·익산 통합

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민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전주·김제 통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전주와 김제가 통합할 경우 전주는 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고 김제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역시 양 지역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전북 도정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충분히 소통하며 정리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10일 오전 전북비오염합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열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의 미래 발전 구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 중단 적극 환영”

권요안 도의원 “주민 주권·군민의 뜻 존중한 현명한 결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이 인기 내 전주·완주 통합 추진 중단을 공식 선언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9일 유희태 완주군수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그간의 통합 논의는 소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완주군민의 뜻이 확인된 만큼 임기 중 전주·완주 통합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신임 도지사의 이번 결단은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이 가져올 지역 불균형과 완주군민의 소외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주민 주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둔 매우 현명하고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권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의 일방적인 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반대하며 통합 반대 사발 투쟁에 나섰으며, 완주군 일원에서 1원 시위를 이어가며 군민들에게 통합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적극 앞장섰다. 아울러 도의

회 본회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김관영 전 도지사의 통합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고, 각종 기자회견과 토론회, 성명 발표를 통해 군민 여론을 대변해 왔다.

특히 권 의원은 주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완주군민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주민투표 결과 존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나아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집행된 과도한 홍보 예산과 편향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강도 높은 감시·견제 활동을 이어왔다.

권요안 의원은 “과거의 일방적 통합 추진은 완주군민에게 깊은 상처와 불안감을 안겼고,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수년간 이어온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완주와 전주 가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번 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도정 운영의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오만호 기자

“국립공원 보존 따른 지역희생 보상 체계 구축을”

임종명 도의원,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국립공원 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국립공원 보존에 따른 지역희생 보상 및 국가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23개의 국립공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2개소가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등 4개의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환경보전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 인접 지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개발과 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토지 이용 제한과 재산권 제약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탐방객 증가에 따른 환경청와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의 행정·재정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지만, 현행 재정지원 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나 단발

성 사업에 머물러 있어 국립공원 지정 이후 규제 기간 누적된 규제 부담과 지역 발전 제약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건의안은 △국립공원 보존지역 특별교부금 제도 신설 △국립공원 규제지역 주민지원 특별회계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 △생활SOC 및 기반시설 지원 확대 △친환경 관광·산림·생태산업 육성 지원 △국립공원 보존 기여도를 반영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명 의원은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 최초 지정 이후 60년 가까이 국립공원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환경보전을 위해 상당한 제약과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환경보전의 혜택은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가 보다 책임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공익을 위해 기여해 온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국립공원 보존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도지사직 인수위 올림픽 유치 특별위원장’ 최형원 전 도체육회 사무처장

“전북만의 힘으로 안돼... 전국적 연대가 답”

민선 9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자로부터 인수위원회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최형원 전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도민과 국민의 열의를 담아 반드시 올림픽 유치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유치는 전북 체육인으로서 평생 꿈꿔온 국가적 과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며 “전북의 장점과 한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전국 시·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순창군 동계초등학교 출신인 최 위원장은 동계초등학교와 동계중학교, 순창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전북대학교 금속공학과를 나왔다. 이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체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일반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는 등 체육 행정 전문가로 성장했다.

1988년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에 공채 1기로 입사한 그는 30여 년 동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도민들의 기대 매우 커
전북이 가진 장점 최대한
살리면서도 부족한 부분
타 지역과 연계 전략 필요”**



안 체육 행정 외길을 걸으며 전북 체육 발전의 산증인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굵직한 성과를 남겼다.

그는 체육회 사무처 재임 시절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2018년 제9회 전국체육대회를 꼽았다. 당시 전북은 하위권을 맴돌던 실적을 떨치고 전국체전 개최와 함께 종합 3위라는 역대급 성적을 기록하며 전국 체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2018년 생활체육회와 전문체육회를 통합해 통합체육회 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며 전북 체육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

가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모든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체육 행정을 해왔다”며 자신의 체육 철학을 설명했다.

그는 “전북 체육인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100%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현장중심의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굵직한 성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번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특별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부담감이 훨씬 더 크다고 털어놓았다. 최 위원장은 “하계올림픽 유치는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사업”이라며 “민약 시작부터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접근한다면 도민들의 실망도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만의 힘으로는 하계 올림픽 유치가 어렵다”며 “전국적인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

도권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대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북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인수위원회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체육인으로서 평생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형원 위원장은 전북 체육 행정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히며,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수립과 국가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30년이 훌쩍 넘는 그의 풍부한 체육 현장 경험과 체육 행정 노하우가 전북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만호 기자

제조 현장 중심 퍼지컬 AI 발전 가능성·중기 혁신전략 논의

국회에서 열린 ‘시3 퍼지컬 인공지능(AI) 프론티어 강국 신기술 전략 포럼’에서는 제조 현장 중심 퍼지컬 AI 발전 가능성과 중소기업 혁신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정진욱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이철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국회사 ‘시3 퍼지컬 AI 프론티어 강국 신기술 전략포럼’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퍼지컬 AI 분야의 세계적 중심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밝혔다. 그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 AI 산업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제는 퍼지컬 AI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가 2080년까지 한국을 퍼지컬 AI

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가로막는 현실적 문제와 해결책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퍼지컬 AI가

제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와 보안 강화, 산업 인프라 구축, 정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포럼은 퍼지컬 AI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산업계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으로 평가받았다. /오만호 기자